

#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두번만에 끝...14일부터 정식 재판

### 현재,尹측 입증 계획서 미제출하자 그대로 절차 종료 국회측, 탄핵사유 중 '내란죄 철회'... '헌법위반'에 집중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 이미션 재판관은 지난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열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현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2·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증거·증인 신청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가 이날 변론 준비



정형식(왼쪽)·이미션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절차를 종료할 뜻을 시사하자 "재판장님, 변론기일이라고 하셔서요. 저희로서는..."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변론기일에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현재는 아울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헌재법과 심판 규칙 등을 근거로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아울러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문제로 충돌했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헌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지난 1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범죄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尹, 한덕수·최상목 등 만류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 국무위원 모이자 강행...檢 "계엄 선포 요건·절차 모두 헌법 위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인무 중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소집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로 온 국무위원 숫자가 아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을 안 한 총리는 5중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

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총복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는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면서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장관은 집무실을 나온 조 장관이 '군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밤 10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얘기해놔서 이제 더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윤 대통령의 소집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직전까지 총 11명의 국무위

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모였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조 장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17분부터 5분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

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온 뒤 오후 10시23분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尹측 "대통령, 적정 기일 출석 의견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은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에 말했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

성도 점쳐진다. 현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b>국회 탄핵소추</b>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2024년 12월 14일 가결
<b>탄핵의결서 제출</b>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탄핵심판 결정까지 대통령 권한 정지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 12월 14일(오후 7시) 24분 권한정지
<b>전원재판부 회부 심리 착수</b>	지정재판부(3명) 사전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9명) 회부 및 헌재, 주심재판관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 착수 12월 16일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주요 결정 사항 공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 송달 답변서 제출 요청 12월 23일 윤 대통령의 계속된 심판 서류 수취 거절로 20일 송달 간주
<b>변론 준비기일</b>	당사자와 관계인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 결정 12월 27일 1회 변론준비기일 / 2025년 1월 3일 2회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 측 입증계획 미제출 상태
<b>소환·공개변론</b>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 소환 - 당사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 다시 정해 재소환 - 재소환 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 출석 없이 심리 가능 피청구인(대통령)을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신문 1월 14일 오후 2시 1회 변론기일-당사자(윤 대통령) 출석 필요 1월 16일 오후 2시 2회 변론기일-윤 대통령이 1회 불출석할 경우 진행 1월 21, 23일, 2월 4일 등 총 5회 지정
<b>재판 평의</b>	재판관들이 청구 건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논의
<b>결정문 작성</b>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 작성
<b>선고</b>	<b>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인용(탄핵 결정)</b> 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 청구 기각

연합뉴스 자료: 헌법재판소

##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 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